

#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방법\*

임대근\*\*

## <目 次>

1. 머리말
2. 한국의 중국 문화정책 연구
3.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4.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방법
5. 맺음말

## 1. 머리말

문화정책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정의는 유네스코(UNESCO)가 일찍이 1967년 모나코에서 개최한 원탁회의 및 그 결과로 발표된 <문화정책: 예비 연구>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1)</sup> 이에 따르면 원탁회의의 참석자들은 문화정책을 정의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첫째 “문화정책이란 한 사회에서 행위 또는 행위의 결여에 대해 활용 가능한 신체적, 인적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사회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특정한 문화적 필요에 목표를 두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용들의 총합”이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A00106). 이 글의 일부는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2010.10.16.: 관동대)에서 <중국문화정책 연구 시론: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한국중국학회 제33차 중국학국제학술대회(2013.8.23.: 서울대)에서 지금의 제목으로 다시 발표한 바 있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부교수.

1) 홍신선 외,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11쪽.

둘째, “문화적 발전을 위한 특정한 표준은 문화가 개성의 충만함과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연계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다소 포괄적인데 대해 최근 학자들은 이를 더욱 구체화, 단순화하여 문화정책을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표(공익)의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sup>3)</sup> 또는 “문화라는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엮어내는 공공 활동”<sup>4)</sup>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sup> 문화연구자 토비 밀러(Toby Miller)와 조지 유디스(Geroge Yudice)는 문화정책이란 “체제의 지원으로 미학적 창조력과 집단 생활방식을 인도하는, 두 측면을 연결하는 다리वाद 같은 것”으로, 그 “구체적인 실현은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의 유발과 관련 조직의 수행을 통해 목표를 완성”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정책은 기술 관료들에게 속한 것으로 창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조직은 정책의 집행을 통해 특정한 예술가나 예술작품이라 불리는 행동자와 그 행동을 유도, 훈련, 분배, 지원, 격려, 거부한다.” 또한 문화정책은 “정부와 노동조합, 대학, 사회운동, 사회단체, 기금회, 기업 등이 모두 창작자를 협력과 지원, 통제, 주장, 선도, 평가하며, 사실상 이들은 통상 이른바 ‘창의적’ 행위라 불리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현케 한다”는 것이다.<sup>6)</sup>

토비 밀러와 조지 유디스의 정의는 비록 그들 자신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정책 연구와 둘러싼 다양한 층위들을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 2)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Paris: Imprimerie Blanchard, 2<sup>nd</sup> Edition, 1969, 10쪽.
- 3) 홍신선 외, 위의 책, 11-12쪽.
- 4) 이홍재, 《문화정책》, 논형, 2006, 17쪽.
- 5) ‘문화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문화행정’, ‘예술정책’, ‘문화단속’(policing culture) 등을 들 수 있다. ‘문화행정’이란 “문화와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행정”(정홍익,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1992)을 의미하는 바, 주로는 (정책 대상의 입장보다는) 정책 주체를 문제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정책’이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단속’에서 “문화는 범법자 또는 가출 청소년으로 간주된다. 경찰이 범법자를 가려내고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이, 정부가 문화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역시 문화정책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05, 141-142쪽.)
- 6) Toby Miller & Geroge Yudice, 蔣淑貞·馮建三 譯, 《文化政策》, 高雄: 巨流圖書公司, 2006, 1~2쪽.

이들의 정의는 문화정책의 목표와 방법, 주체와 대상, 관점(이념)과 실천의 문제 등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 실제로 문화정책에 대한 탐구는 적어도 이와 관련된 네 가지 층위, 즉 문화정책의 주체와 대상, 방법, 관점(이념)을 검토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조금 더 복잡한 다른 의제들과도 관련된다. 이에 대해 토니 베넷(Tony Bennett)의 다음과 같은 진일보한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첫째, 문화를 특정한 행정의 영역으로 간주할 때, 문화 규정(정의)에서 정책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포괄적인 분야를 그것들에 맞는 특수한 행정부의 대상, 목표 및 테크닉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영역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렇게 정의된 문화의 서로 다른 영역과 구체적인 정치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영역들과 관련된 독특한 방식들을 적절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서로 관련된 문화 영역의 실체와 스타일 모두에서 동일한 권력의 행위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지적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sup>7)</sup>

토니 베넷의 논의는 ‘문화정책’이 아닌, ‘문화연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수행됨으로써 자신도 지적하듯이 다소의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지만,<sup>8)</sup>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을 곧바로 지시 대상으로 삼을 때보다, 더욱 복잡한 관계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즉 토니 베넷의 논의가 진일보하다 함은 우선 문화와 정책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우리가 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즉 문화정책에 대한 탐구에 있어 적어도 네 가지 층위를 검토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한 과정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한 언급이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그러니까 “문화를 특정한 행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작업의 의미와, “특수한 행정부의 대상, 목표, 테크닉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영역들을 구분할 필요성”을 통해서 각각 문화 개념과 문화정책의 관계, 정책 주체와 대상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는 바이다.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치적 관계의 확인”과 “관련된 독특한 방식들을 적절하게 발전시킬 필

7) Tony Bennett, 〈문화연구정책〉, John Storey,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614쪽.

8) Tony Bennett, 위의 글, 612쪽 참조.

요” 및 “계획된 지적 작업의 수행 필요”를 통해서 정책 방법과 관점(이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토니 베넷의 논의가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문화연구의 많은 지적 작업들이 자극을 준 바와 같이, 문화와 권력의 문제를 역시 정책의 영역에서도 문제삼아야 함을,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권력 주체의 관계들을 검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의견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만의 사회학자 린신화(林新華)가 명확하게 지적하듯이 “문화정책은 각 사회마다 다른 형식으로 연관된다”<sup>9)</sup>는 명제를 따라 중국 문화정책의 특수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1) 우선 국내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간략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2)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당대 중국 문화의 역사적 검토, 중국 문화 형성의 주체에 대한 인식 문제, 당대 중국 문화산업의 성장, 동아시아 내 초국적 문화 이동에 대한 설명의 층위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나아가 현 단계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적 정책 주체로서 정책 기구 연구, 비공개적 정책 주체로서 인적 네트워크 연구, 정책의 표상으로서 정책 ‘문건’ 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의 중국 문화정책 연구

국내에서 중국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련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학철의 <문화정책과 중국 공산당>(1946)은 중국 문화정책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평론으로 보인다. 이 글은 <조선주보>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sup>10)</sup> 1979년 출판된 <중공의 문화정책연구>에는 민두기의 <중공에 있어서의 호적(胡適) 사상비판운동(1954~1995)>과 이병

9) 林新華, 《文化政策新論》, 新北: 揚智文化, 2002, 68쪽.

10) 이 글은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대사전>에 그 제목이 수록되어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출판부, 2004.

한의 〈중공의 문자개혁과 한자 간화 방안〉이라는 글 두 편이 실렸다.<sup>11)</sup> 이들은 중국 문화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사례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발표된 이익성의 〈중공 문예정책에 관한 고찰〉<sup>12)</sup>은 중국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적 고찰로서,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문화대혁명 이전,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종결부터 1979년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과정을 탐구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1979년까지 문예와 관련된 사건들, 즉 ‘홍루몽 연구 비판’, ‘정령(丁玲) 비판’, ‘신문예 정책’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주로는 문예정책에 정도돼 있어 오늘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엿보인다.

1990년대 중·후반만 해도 국내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생소한 분야”였으며,<sup>13)</sup> 본격적인 문화정책 연구 자체는 뒤늦게 학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문화정책 연구는 지역 연구(area studies)로서 중국 연구의 정치·경제학 연구 또는 언어·문학적 편향이 만들어낸 연구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부응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관련한 노력도 더불어 시작되면서 학술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 이후에는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자료들과 보고서 등이 축적되기 시작했고<sup>14)</sup> 이제는 다양한 개별 영역 및 통합적 영역으로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개별 영역으로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광, 영화,<sup>15)</sup> 애니메이션,<sup>16)</sup> 게임, 교육,<sup>17)</sup> 종교 문화<sup>18)</sup> 등과

11) 민두기 외, 《중공의 문화정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9.

12) 이익성, 〈중공 문예정책에 관한 고찰〉, 《중국연구》 제5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1981.

13) 정홍익, 〈문화정책 연구의 영역과 접근방법〉, 이춘길 외, 《문화정책 연구의 새로운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119쪽 참조.

14) 문화관광부, 《중국 문화정책, 문화산업》, 2000; 통일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2004 등을 참조.

15) 영화산업 관련 연구로는 강내영의 〈전환기 중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특징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2001년 WTO 가입 후 가속화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화와 개방정책에 기인한 중국영화시장의 성장에 주목하면서 3년 동안의 영화정책과 영화시장과 작품경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중국 정부의 영화정책이 어떤 전략과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영화정책으로 추동된 영화산업의 시장화가 현재 어떤 단계와 특징을 보이고

관련된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sup>19)</sup>

중국의 문화정책을 특정한 연구들(frame)을 통해 분석하고 탐구하고자 시도한

- 
-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했다. 강내영, <전환기 중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특징 연구>, 《영화연구》 제48호, 한국영화학회, 2011.
- 16) 대표적으로는 김영재,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비교: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정책과 한국과 유사한 산업적 역량을 보유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본격적인 산업진흥정책이 집행되기 시작한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을 비교했다. 탕루이(Rui Tang)·김일태의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과 정책 연구>는 중국 근·현대 애니메이션을 문화와 정책, 경제적 측면에서 시대 순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 분석했다. 김영재,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비교: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제13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8; 탕루이(Rui Tang)·김일태,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과 정책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제15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 17) 중국의 교육 문화정책 연구 중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영순의 연구는 시대별로 중국 중점 대학 정책의 주요 배경과 목표, 과정을 다루고, 중점대학정책의 형성과정 속에서 드러난 정책적 특징들을 다루고 있다. (박영순, <중국 고등교육정책의 변천과 특징: 중점대학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5호,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2009) 그 밖에도 다음 연구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정진돈, <중국의 개방화 이후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홍인표, <오십년대 이후 중국대륙의 어문정책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4; 금희연·전인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서남중국 소수민족의 정치참여와 교육 및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1998; 최해금, <중국 대학교육 개혁정책의 변화와 과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3; 박영록, <중국의 “科教興國” 정책과 대학교육의 대중화>, 《중국학논총》 제19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5 등.
- 18) 중국 종교 문화정책 관련 연구 성과는 문화정책 연구 중에서도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이를 다루는 연구가 특징적이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효열, <현대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박만준, <중국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성수, <중국의 종교정책과 법규에 관한 연구: 기독교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진, <중국의 기독교정책에 관한 연구: 노선의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1998; 이상범, <중국 기독교정책의 변천과정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1; 최정호, <1979년 이후 중국 종교정책에 관한 고찰>, 충신대 석사학위논문, 2003 등.
- 19) 그 밖에 중국의 생활문화, 한류, 게임 산업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들도 진행됐다. 조용관, <毛澤東體制下的 中國의 家庭文化政策>, 《민주문화논총》 제32집, 민주문화아카데미, 1993; 백원담, <90년대 중국의 문화현실과 문화정책>, 《민족예술》 제51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8; 임대근, <최근 중국 영화산업의 쟁점들>, 《중국학연구》 제35집, 중국학연구회, 2006; 최성일, <중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11권 제2호,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김나경, <중국문화산업정책의 현황을 통한 한류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모색>,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정광호, <중국 문화산업 정책 연구: 게임 산업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8 등.

성과로는 이주노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sup>20)</sup>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과 문화시장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문화산업에 시장권력과 정치권력이 어떻게 침투, 관철, 작동되는가, 지식인 담론은 이 양자와 어떠한 길항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중국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경제정책의 변모에 따라 문화정책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요소의 허용과 시장경제 체제제로의 전환, 지역 간 불균등 발전과 계층 간 빈부격차의 발생 등을 시장경제의 큰 흐름으로 보고, 이에 따라 문화정책 또한 문화활동 활성화와 관리 체계 구축, 문화시장의 법에 건설 및 관리 감독 강화, 문화산업의 제기 및 문화사업과의 구분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한국에서의 중국 문화정책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특정한 장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수행돼 오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국내에서의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역사가 일천함을 의미하며, 또한 동시에 전문성과 역사성, 구체성, 비판성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3.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층위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른 학문적·실천적 층위에서의 변화와 기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 중국 문화 정책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사회주의 중국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20) 이주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2009.

로 당대 중국의 문화 정책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해석이 필요하다. 1949년 이후 중국 당대사의 굴곡 많은 역사적 변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현상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촉발된 경우가 많았다. 멀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1942)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문화의 기원은 제1차 ‘전국문학예술인대표대회’의 개최(1949), 후평(胡風) ‘반혁명 집단’ 사건(1954), ‘쌍백방침(雙百方針) 시행(1956), 반우파투쟁(1957), 〈해서의 파직〉(海瑞罷官) 비판(1965)과 문화대혁명의 발발(1966), 문화대혁명 시기 이른바 ‘문예흑선독제론’(文藝黑線專政論)과 ‘근본과업론’, ‘삼돌출(三突出) 원칙’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당대 중국 사회 전체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문화’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단지 ‘문화’라는 분절된 영역만이 아닌 당대 중국 역사를 구성하는 관건적 요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단지 고립되고 분절된 영역으로서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중국의 역사와 사회가 변천해 온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로서 필요불가결한 접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연관돼 있다.

둘째, 중국 문화정책 연구에 관한 문제는 당대 중국 문화의 형성 주체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문화에 관한 많은 담론들은 사실 자각적이든 비자각적이든 중국 문화의 형성을 민간의 자율적 행위로 해석해 왔다. 문학을 비롯한 공연, 영화, 미술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은 중국의 문화 현상들이 작가 개인 혹은 민간 집단에 의한 본원적(ultimate)이고 자율적(autonomous)이며 자생적(spontaneous)이고 관습적인(conventional)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들은 대체로 중국의 문화 현상에서 정책적 요인을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정책 요인이 문화 형성의 변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와, 간혹 정책 요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중국 문화 형성 주체로서 개인 혹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저항 담론화(bottom-up)하는 경우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을 모두 거부하면서, 실제로 정책 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민간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지에 대한 문제, 나아가 정책 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시대 중국 문화 현상의 형성을 지원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한 문제 등, 즉 권력의 장력과 그 방향성에 관한 문제를 두루 고찰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동시대 중국 문화 현상이 타율적이고 인위적이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하향적(top-down) 권력(power) 행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간주한다.

셋째, 그 동안 국내 중국 문화 연구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장르들을 섭렵하게 되면서 이전의 전통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국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생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일상문화나 전통문화의 영역의 '다름'을 묘사하면서 문화를 소재 내지는 대상으로 환원, 호기적(好奇的) 면모의 충족을 위해 복무하거나, 다양한 장르 내부의 속성과 개별 텍스트적 분석에 간혀 있는 경우들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어서 여전히 이른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 대한 분명한 인식론적 경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중국 문화연구가 주로 전통문화의 영역에만 머물면서 당대적 동시성(contemporaneity)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대적 동시성의 확보는 상호 참조 체계의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넷째, 중국 문화산업의 부상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 산업은 최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문화창의산업'(文化創意產業)으로 명명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대륙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의 막대한 정책적·산업적 투자는 가히 경이로울 정도다. 2009년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는 약 8천억 위안(RMB)에 달할 정도이며 2000년대 이후 이 수치는 매년 경신을 계속해 왔다.<sup>21)</sup> 중국의 문화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1992년까지 기초적인 탐색 과정에 있었고 이후 약 10년간의 문화시장 형성 과정을 거쳐 2003년 이후에는 고속성장기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자료에

21) 中國社會科學院, 《2009年: 中國文化產業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따르면, 중국 문화산업의 연간 규모는 2004년 3,102억 위안에 불과하던 것이 7년간 해마다 11.01%에서 37.10%의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연평균 23.55%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서 2011년에는 그 규모가 1조 3,479억 위안에 이르렀다. 2011년의 경우만 보면, 그 규모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2.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중국의 문화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up>22)</sup> 중화권 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산업의 확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안 문화창의산업연구연맹'(兩岸文化創意產業研究聯盟)을 결성하고 '세계화인문화창의산업포럼'(全球華人文化創意產業論壇)을 개최(2010.5.15~16; 대만사범대학)하는 등 학문적 지원과 비판을 위한 공론장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의 이러한 발전 추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지금의 판단이다. 이른바 'G2'라는 명칭 속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유일하게 취약한 분야로 손꼽혀 온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대국으로 부상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이른 시일 안에 중국 문화는 '한류' 이후 아시아 문화 시장을 주도할 '만다린 팝'(Mandarin Pop)의 확장 또한 쉽게 예견되는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23)</sup>

22) 임대근, <문화콘텐츠산업에 날개를 달다>, <친디아저널> 제80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20쪽. 원자료는 <中國文化報> 등을 참조.

23) 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정기은의 <중국의 문화정책 발전현황>을 언급할 수 있겠다. 정기은은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책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최근 중국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사회주의 체제로서 중국 문화산업 시장의 특수성과 정책의 기본방침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유효한 중국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정기은의 또 다른 연구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는 21세기 한국 관광산업 발전의 관건이자 한국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중국 관광시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 유치로 인한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를 관련 법규 및 출입국 제도, 관광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관광정책 변화로 인한 시사점과 이에 대한 한국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관련업계 및 행정 당국의 대중국 관광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송진영의 <중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은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토대로 문화원형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를 통한 콘텐츠 개발 현황을 논하고 있다. 그는 먼저 WTO 가입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개괄하고,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현대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정기은, <중국의 문화정책 발전현황>, <문화관광연구> 제3권 2호,

다섯째, 동아시아 내 초국적 문화 교환 및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동아시아라고 통칭되는 한·중·일은 '문화벨트'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사적 교류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도 역시 활발히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는 이제 하나의 권역(region)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문화'는 현상적으로 '초국적성'(trans-nationality)을 가장 용이하게 구현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의 상황에서 우리와 최근접한 국가로서 중국 문화정책에 대한 수집과 정리, 번역, 해석은 향후 우리의 대외 교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호 참조의 측면에서 협조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오늘날 중국은 문화를 '산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 내부 문화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거시적·미시적으로 탐구하면서 다층위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 역내 교류에 있어,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층위에서 살펴본 중국 문화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즉 사회주의 중국 문화 정책에 대한 역사적 탐구의 의미, 당대 중국 문화의 형성 주체 인식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 편향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 국내 중국 문화 연구에 대한 성찰의 층위에서 중국 문화연구의 비동시성이라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의미, 중국 문화산업의 부상에 따른 대응의 의미, 동아시아 내 초국적 문화 교환 및 교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상호 참조 체계의 구축 가능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상호 보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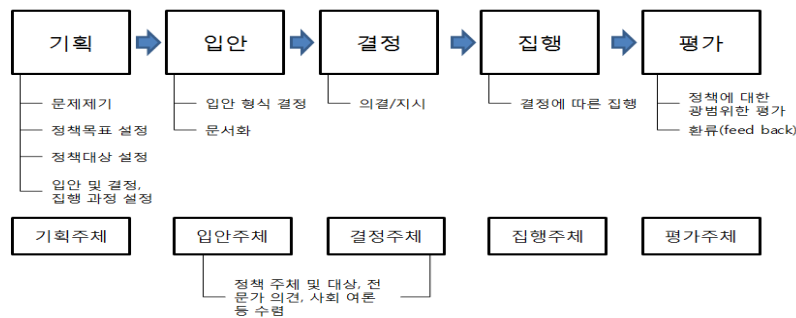
---

한국문화관광학회, 2001: 정기은,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 《문화관광연구》 제5권 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4: 송진영, 〈중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 《인문콘텐츠》 제3호, 인문콘텐츠학회, 2004.

#### 4.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방법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른바 ‘방법’이란 ‘방법론’(methodology)로서의 엄격한 분과학문적 층위의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방법론은 무궁한 방식으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분과학문적 층위에서 방법론의 원용이 아니라는 의미는, 중국 문화정책 연구가 정치학이나 행정학, 언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들 간의 학제적 접근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뜻하기도 함과 동시에 중국 문화정책 연구에 특정하고 고정된 방법론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양적 방법론이나 질적 방법론 등이 필요할 경우에 모두 동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은 저마다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이 엄격한 의미의 방법론이 아니라는 의미 역시 이러한 전제 위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중국 문화정책을 탐구해 들어가는 일종의 ‘경로’에 해당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져도 좋을 것이다.

그 ‘경로’를 탐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문화정책의 기획과 집행, 결정 등에 관한 일련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이 따르는 일정한 수행 절차를 간략히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24) ‘방법론의 해방’에 관하여는 임대근, <근혹스러운 중국문화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1집 2호, 현대중국학회, 2010 참조.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는 위와 같이 '기획'과 '입안', '결정', '집행' 및 '평가' 등의 정책 행위가 수반된다. 이른바 '기획' 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목표를 수립하며 정책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입안'의 단계에서는 법률이나 명령 혹은 규정 등과 같은 '입안'의 형식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 단계에서는 결정의 주체에 의한 의결과 지시 등의 행위가 수반된다. '집행' 단계에서는 '결정'된 정책을 직접 시행하게 된다. '평가' 단계에서는 이미 '집행'된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통해 이른바 '환류'(feed back)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sup>25)</sup>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단계의 문화정책의 수행 과정에는 역시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개입한다. 이를 그 과정에 따라서 기획주체, 입안주체, 결정주체, 집행주체, 평가주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획주체에는 중앙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입안주체에는 역시 중앙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의회 등이 포괄될 수 있으며, 결정 주체에는 의회와 정부 등이 포함되고, 집행주체에는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등이 포함되고, 평가주체에는 앞서 열거한 각각의 주체는 물론 정책 대상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상의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특정한 정책을 수행할 때 그 정책대상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면, 그 정책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정책대상의 범주는 크게 지역, 연령, 성별, 종족 등의 근거로 나뉘게 될 것이다. 정책방법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정국가에서의 정부의 일체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권위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정책 범위나 예산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특정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정책관점(이념)의 문제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특히 문화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통제론, 자율론, 도구론, 목적론 등의 입장들을 대변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주체의 문제와 방법의

25) 문화정책 집행 과정에 관한 분석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도 있다. 박광국, <문화정책 집행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이춘길 외, 《문화정책 연구의 새로운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183-218쪽.

문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책 대상의 경우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매우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하고, 관점(이념)의 문제 또한 더욱 심층적 층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문화정책을 탐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입구의 문제로서 주체와 방법의 문제를 상정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 세 가지 영역으로서 우선 (1) 중국 문화정책의 수립 주체로서 정책 기구와 (2) 역시 중국 문화정책의 수립 주체로서 인적 네트워크 문제, (3) 그리고 중국 문화정책의 방법의 표상으로서 '문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문화정책의 수립 주체로서 정책 기구에 대한 연구: 중국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의 주체로서 정책 기구는 당과 정부를 공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를 구축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공산당 산하의 문화정책 관련 기구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즉, 공산당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는 중국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의 막강한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 산하에는 문화부, 국가언론출판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2013년 3월 19일 언론출판총서와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합병) 등 문화 관련 부서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독권과 지도권은 모두 중앙선전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문화정책의 주요한 수립과 집행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전부의 역할과 기능, 조직 등에 대한 연구를 면밀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26)</sup>

26)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이데올로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종합 직능 부서다. 1924년 5월 공산당 중앙이 선전과 조직, 노농 등 부서를 공식 설치한 뒤 뤼장룽(羅章龍)이 초대 선전부 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기간에 조직이 폐지되었다가 1977년 10월에 공산당 중앙의 결정으로 복위되었다. 그 주요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의 이론연구와 학습, 선전 업무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 (2) 사회여론의 조성을 책임지며, 중앙의 각 언론 기구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3)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도정신을 위한 산물의 생산을 책임진다. (4) 전국적 혹은 지역적인 사상 정치 업무를 기획하고 배치하는 임무와 공산당 중앙의 조직부와 협력하여 당원 교육 업무를 책임지기 위해 당원의 교육 교재를 편찬하며 관련 부문과 더불어 군중 사상 교육 업무를 연구하고 전개한다. (5) 공산당 중앙의 위탁을 받아 중앙 조직과 협동으로 문화부, 언론출판서, 중국사회과학원 지도 간부를 관리하고 또한 중앙 조직과 더불어 인민일보사,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 신화사 등 언론 기관과 각 기관을 대표하는 지도 간부들을 관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선전부장의 임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5) 선전·사상·문화 사업의 발전에 대한 지도방침을 제기하고, 선전·문화 계통이 제정하는 정책, 법규를 지도하며, 공산당 중

당대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 형성의 주요한 주체인 당·정의 공적 입장을 수집하고 확인하며 나아가 그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의 첫 걸음은 정책 기구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둘째, 역시 중국 문화정책의 수립 주체로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중국의 정책 수립 과정은 매우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토론과 논쟁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토론과 논쟁 자체는 중국 사회를 파악하는 각자의 입장과 태도, 파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가 상시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처럼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사회로서의 중국에 대한 구체적 탐구가 단지 우리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이문화적 접근의 설명 경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중국 사회 자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관시’에 대한 검토 또한 이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영화정책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 문화정책 전반으로 확장한다 해도 같은 방식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첫째, 인적 네트워크를 탐구하는 일은 제도나 체제, 혹은 구조에 관한 탐구와는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으로서 “이런 작업은 [...] 중국 영화가 체제, 구조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진일보하게 생각해 보면, 중국 영화가 인적 체계라는 심층구조와 제도적 체계라는 표층구조로 구성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중국 영화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심층(인적) 구조와 표층(제도)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이 된다.” 나아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사회적으로 작동되는 과정에서 다분히 정의적(情誼的)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에 대한 회의는 일거에 거둬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문제 해결 거리”(solution distance for problem)라는 개념을 다시 원용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적 유대감의 형성을 통해 중국 영화 현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한

양의 통일 업무 부서에 근거하여 선전·문화 계통 각 부문 간의 관계를 조율한다. (6) 공산당 중앙이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中共中央組織部編, 《中國共產黨組織工作辭典》, 黨建讀物出版社, 2001, 63-64쪽.

다. “넷째, 그룹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화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탐구 자체를 회의하는 지적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sup>27)</sup>

셋째, 중국 당·정 문건과 공적 정보의 축적의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 사회에서 ‘문건’은 공식 정책의 입안과 생산, 집행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지 법률 체계에 근거한 법령(法令)이나 조례(條例) 등과 같은 형식을 넘어서서 결정(決定), 공고(公告), 통고(通告), 통지(通知), 통보(通報), 의안(議案), 보고(報告), 지시 요청(請示), 답변(批復), 의견(意見), 공한(函), 회의기요(會議紀要), 요강(綱要), 결의(決議), 방법(辦法), 지시(指示), 의견제시(批示) 등 다양한 행정 공문들과 각급 지도자들의 연설(講話)이나 기관지의 사설(社論) 등까지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두 기관, 즉 국무원과 당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공포된다. 또한 ‘문건’이 공포되고 나면,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 격변의 당대사를 살펴보다도 모두 이러한 ‘문건’들을 근거로 하여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됐다. 그리고 ‘문건’은 중국 정부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대변되고 있다. 따라서 ‘문건’은 때로 공적 언어들로만 구성된 무료한 문자의 나열들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이들 문건에 대해 행간에 숨겨진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독해야말로 중국 사회의 공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중국의 문화정책은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장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상으로서의 ‘문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분석은 미진했다. 예컨대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동시에 정책 관련 ‘문건’들의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언어적 장애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내 문화연구 및 문화콘텐츠연구 관련 학계, 정책 입안을 위해 해외 정책에 대한 참조를 필요로 하는 행정

27) 임대근, <중국 영화계의 인적 네트워크 연구>, 《중어중문학》 제54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3.

부, 그리고 문화산업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오픈 소스(open source)로 '문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한국어 번역본은 국내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입안, 산업 현장에 필수 불가결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자료로 구축되어 관련 연구 및 논의가 확산될 것이다. 현재 1949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문화 정책 관련 '문건'은 적어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문건'을 사회적 영향력, 학술적 중요도, 산업적 시의성, 정책적 긴급성 등의 기준에 의해 중요도를 판별한 뒤, 순차적으로 번역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 역사적 맥락 등에 대한 해제를 통해 한국어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정책적으로 시급한 '문건'들은 물론, 이의 기원을 검토하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로서 당대 중국 문화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역사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의 삶에 특정한 변수가 아니라 언제나 상수로써 개입해 왔다.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 한·중 수교(1992년)가 이뤄질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현대사에서의 단절이 있었지만, 이 또한 직접 당사자로서의 단절만을 의미할 뿐, 상호 실존적 영향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교 이후 한·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전 국가적·사회적 분야에서 급속히 밀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중국 부상론, 중국 위협론 등 중국 관련 각종 담론들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당이 생산해내고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한 추적과 해석은 빈약한 편이었다. 물론 산업 현장에서 일부 경제 정책 관련 정보들이 수집되고는 있으나 특히 학술 연구와 정책 기반을 위한 자료에 대한 추적과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중국 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으로 소수일 뿐 아니라, 일부 '문

학' 관련 정책들이 어떠한 사상적·정치적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 또한 특정 분야와 일정 기간에 제한된 경우가 다수이다. 그나마 이러한 경향도 최근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점증하면서 요구되고 있는 필요에 의해 등장한 현상이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주로 개인 역량에 치우쳐 있어서 광범위한 문화정책의 흐름을 분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중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중국의 문화정책이 우리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에 중국 문화정책 전반의 변화 양상과 향후 예측을 위한 기본적 토대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중국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공식 문건의 통계,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 각 분야별 문화정책 및 관련 문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필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 연구자들과 관련 기관들은 향후 연구의 진일보한 전진을 위해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중국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정책 연구는 분과학문적 입장에서 말하면 행정학 분야의 학문적 논의의 영역으로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지역연구의 입장 등이 부각되면서 중국연구의 범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중국연구는 자료 접근에서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각 분야의 연구를 포섭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일부 인문학적 입장의 중국연구자들은 중국 문화 형성의 기인을 주로 자율적이고 민간적인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왔다. 이러한 '자율적 열정'이 비판적 입장의 문화 혹은 대항문화의 형성을 잘 설명하는 틀을 갖추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들의 인치적 요소가 강한 중국적 상황에서 '정책'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중국 문화정책의 주요한 주체로서 정책 기구에 대한 연구,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중국 당·정의 정책을 한 눈에 보여주는 표상으로서 '문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 사회를 견인하는 중앙 정부와 공산당, 그리고 지방 정부가 생산하는 공적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그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건' 중에서도 법률 제정의 과정에 개입하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의견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제정이 가능한 '하위문건'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건은 그것 자체의 표층적 중요성 뿐 아니라, 그 행간에 직조되어 있는 심층적 의미들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의미들을 잘 읽어낼 수 있을 때, 향후 중국 사회가 추구하는 정책적 지향과 향방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건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 줄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구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출판부, 2004.  
 문화관광부, 《중국 문화정책, 문화산업》, 2000.  
 민두기 외, 《중공의 문화정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9.  
 이춘길 외, 《문화정책 연구의 새로운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05.  
 통일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2004.  
 홍신선 외,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John Storey,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中共中央組織部編, 《中國共產黨組織工作辭典》, 黨建讀物出版社, 2001.  
 林新華, 《文化政策新論》, 新北: 揚智文化, 2002.  
 中國社會科學院, 《2009年: 中國文化產業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Toby Miller & Geroge Yudice, 蔣淑貞·馮建三 譯, 《文化政策》, 高雄: 巨流圖書公司, 2006.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Paris: Imprimerie Blanchard, 2nd Edition, 1969.
- 이주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2009.  
 이익성, 〈중공 문예정책에 관한 고찰〉, 《중국연구》 제5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1981.  
 임대근, 〈'근혹스러운' 중국문화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1집 2호, 현대중국학회, 2010.

- 임대근, 〈중국 영화계의 인적 네트워크 연구〉, 《중어중문학》 제54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3.
- 임대근, 〈문화콘텐츠산업에 날개를 달다〉, 《친디아저널》 제80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 정기은, 〈중국의 문화정책 발전현황〉, 《문화관광연구》 제3권 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1.
-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개념들과 분석〉, 《한국행정정보》 제25권 제4호, 1992.
- 최성일, 〈중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11권 제2호,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中文提要〉

**中国文化政策研究的意义及方法**

本文要探讨中国文化政策研究的意义及方法如下：第一，回顾韩国内中国文化政策研究的历史；第二，探讨中国文化政策研究的意义与必要性；第三，探讨中国文化政策研究的方法。韩国的中国文化政策研究，在2000年代后期以前断断续续的进行，自从2000年代后期起正式开始的。这表示韩国对它的研究历史不长，也表示它不具有专门性、历史性、具体性和批评性等。因此，这样的情况一直给我们提醒他的必要性。它的必要如下：第一，要探讨当代中国文化形成的历史性问题；第二，要探讨形成中国文化的主体问题；第三，要探讨韩国内中国文化政策研究的现状；第四，要探讨当代中国文化产业的成长问题；第五，亚洲内跨国文化流动问题等。本文从三个层面提出中国文化政策研究的方法如下：第一，要进行作为公开政策主体的政策机构如对中共中央宣传部等的研究；第二，要进行作为非公开主体的人际网络研究；第三，要进行作为代表政策的表象，即“文件”研究等。

关键词：文化政策；中国文化政策；政策机构；人际网络；文件研究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